

후보만 20명... 달아오르는 민주 당권경쟁

총선 공천권에 과열 앙상... 친문 후보 7~8명 '교통정리' 주목 적합도 1위 김부겸 출마 관심... 일부, 캠프 구성 등 준비 돌입

8·25 정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다음 주 중에는 경쟁 구도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당 대표 출마를 결정한 주자들은 선거사무실 준비에 발 빠르게 나섰다.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당 대표 경쟁에 20명 가까운 후보군이 형성된 상황인 가운데 최근 중앙당이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만간 후보군이 분리·압축될 전망이다. 특히, 당권에 도전하는 법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7~8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교통정리'

가 되느냐가 주목된다. 우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이해찬(7선) 의원의 당 대표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 의원은 대표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맞이한 정적으로 뒷받침하려던 이 의원의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기 어렵고 강성인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야권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잇달고 있다. 법 친노 진영의 빅 브라더격인 이 의원의 출마는 청와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4선의 김진표 의원과 친문 핵

심으로 거론되는 전해철(재선)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토대로 경제 대표론을 내세우며 호남을 공략하고 있다. 목포 출신의 전 의원은 '혁신의 시대정신'을 무기로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설도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문 진영의 지지 약속이 있어야 김 장관이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4선의 고홍 출신 송영길 의원은 오는 26일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광주와 전남지역에 지지 포박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송 의원은 특히, 이번 전대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관리형 대표로는 민주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시대의 성공을 위해 전투형

대표가 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5선의 이종걸 의원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당권 재도전에 나섰다. 4선의 설훈·최재성 의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4선), 우원식 의원(3선)도 주변의 권유 속에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3선의 이상호·윤호중·이인영 의원과 재선의 박범계·신경민 의원 등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조선의 김두관 의원도 선거캠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 최고위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광주의 강기정 전 의원과 전남의 서갑원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원외지만 당권 주자와 연대할 것이라면 최고위원에 입성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싸우다 끝난 한국당 의총

'박성중 메모' 놓고 계파 갈등... 친박계, 김성태 사퇴 요구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당 수습을 위해 21일 두 번째로 가진 의원총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 충돌했다. 계기는 지난 19일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박성중 의원의 메모였다.

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자신의 메모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자 갈등 격화를 우려한 지도부가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의원 메모에는 '친박·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서정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 박명재, 정종섭',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는 곧바로 '해묵은 계파 대결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이날 의총에서 박 의원은 "친박들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한다. 당권을 잡

으면 우리(복당파)를 칠 것이다'라는 한 모임 참석자들의 우려를 메모한 것'이라고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모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 즉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장우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도 "박 의원이 계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도 선거캠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행은 공개 발언에서 "분열하고 또 다시 싸워야 하는 구조는 제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계파 갈등이 재연된 모양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체성 잡음' 바른미래

구 바른정당 인사들 "진보·보수 공존' 일방 발표 유감"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정체성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 창당 선언문에서 당의 정체성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9~20일 이틀 간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 결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당 정체성을 수정했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 중도'를 '합리적 진보'로 바꾼 것이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합리적 진보 + 개혁적 보수당? (워크숍에서) 합의하지 않았다. 워낙 많은 이견이 있어서 함께 논의하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과 의원 전원이 함께

회합하고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른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워크숍 토론에서 대해 솔하게 토론했고 모두가 공감했다"며 "공감했으면 공당으로서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워크숍에 불참한 유 전 공동대표 등에게 워크숍 논의 내용과 입장문 발표 배경을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면서 당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한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언제든 지 이념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문대통령 두번째 방러 월드컵 멕시코전 관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2박 4일 일정의 이번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 첫 일정으로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만났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한 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방러 이틀째인 2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 2018 월드컵 한국-멕시코 조별 예선전을 관람하며 한국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러시아 도착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환영" vs "이권 싸움터 아냐"

한국당 제외 4당 긍정적

여야 정치권은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초점을 달린 논평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합의안 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조속히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가동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수사

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위게임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관련 내용은 조정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합의안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검·경 이기주의로 인한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 합

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 인사와 줄 세우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쟁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靑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사의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해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가 수리되면 이달 안으로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를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비서관이 사의를 표한 것은 민주당 당대회를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지역위원장 대행을 세운 뒤 지역구에서 공

모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강하게 퍼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진 비서관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던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은 잔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청와대 조직진단과 업무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 작업들이 끝나면 이어질 조직개편 시기에 후임 인선도 함께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